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대북정책·남북관계 어떤 영향 미치나

개성공단·금강산사업 현상 유지 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15일 채택되면서 정부의 대북기조 변화 여부를 비롯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결의안 내용으로 미뤄볼 때 정부의 포용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 간 대화는 물론 그동안 미사일사태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던 민간 경험 및 교류의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도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포용정책 기조변화 없을 듯=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으로 볼 때 정부는 앞으로도 포용정책을 계속 끌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유엔 결의안에 경제제재가 있긴 하지만 대화 노력도 강조됐기 때문이다.

결의안에는 무력 제재를 할 수 있는 7장 42조가 포함되지 않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함께 각국이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이 포용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9일 기자회견에서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지만 10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는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좋겠다"며 신중론으로 기울었다.

특히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13일 비공식간담회에서 "포용정책의 방향은 맞는데 능력이 부족했다"면서 "포용정책을 매도, 매장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도 포용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현상유지=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대북 결의안과 관련, "이번 결의안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은 무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설명에서 이같이

포용정책 기조 유지... 당국간 대화는 단절 쌀·비료 지원 중단 경험·민간 교류 타격

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자금과 금융자산 등을 동결토록 한 것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인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구체화할 '조율된 조치'의 대상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상황에 비춰 개성공단의 추가 분양 등 사업 확

대를 위한 조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 경험·교류, 인도적 분야도 타격=미사일 발사 이후 계속된 당국간 대화 단절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만 해도 납축은 북한의 대화 제안을 기다려왔고 이를 풀과구로 활용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북측이 대화를 제안해도 이에 선뜻 응하기가 어렵게 됐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측에서 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쌀·비료 지원 중단이 가장 큰 제재"=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비공식간담회에서 "정부는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대북 레버리지(지렛대)의 상당 부분, 금액으로는 80~90%를 썼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엔 결의안과 별도로 추가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그는 "쌀과 비료 중단이 가장 효과적인 제재"라며 이미 정부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핵실험 이후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면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15일 북중 접경도시인 신의주 주민들이 압록강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압록강 건너 중국 당에서 촬영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14일(현지시간)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후 안보리 연설을 통해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북한은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유엔이 제재에 나설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경고해 왔다. 지난 11일에는 외부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연이은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경고했고,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 때는 "전쟁의제력을 백방으로

"제재 나설때 선전포고 간주"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 "물리적 대응조치" 강력 반발

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제재결의안 통과에 따라 북한이 위기지수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제재에 굴복하기보다 추가적인 위협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북 소식통들 사이에는 북한이 조만간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첩보도 들어오고 있다. 오는 17일 '토.드(타도제국주의동맹-김일성이 1926년 만주에서 최초로 결성했다는 혁명조지) 결성 80주년'이 1차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영변 원자로 플루토늄 추가 추출 등의 위협도 가능하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을 더욱 자극해서 핵활동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7월 실패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수도 있다. 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유엔 탈퇴로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이 북한을 출몰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감시의 근거를 마련해 뒀다는 점에서 대량살상무기(PSI) 참여 확대에 따른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자신들의 해상 통로가 봉쇄된다고 판단할 경우 국지적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역으로 대화와 협상의 절박성을 이끌어 내려고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정일 '화려한 식탁' 끝?

유엔 회원국 北과 사치품 거래 금지

코냐, 프랑산 와인, 바닷가재, 캐비아(참갑상어 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소 즐겨먹는다는 음식들이다. 김 위원장은 미식가로 유명하다. 전용 열차로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실어 나르는 것은 물론 피자를 먹기 위해 이탈리아 요리사를 북한으로 데려왔을 정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김 위원장의 '화려한 식탁'에도 변화가 생길까. 단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은 회원국들에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식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들이 김 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공급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 지도자 동무'(Great Leader, Dear Leader : Demystifying North Korea Under The Kim Clan)의 저자인 베르틸 린트너는 "북한은 회사들의 이름을 항상 바꾸기 때문에 이를 회사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전기를 쓴 마이클 브린도 북한의 사치품 거래는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사치품 거래 금지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고위층은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무역회

연합뉴스

"美, 北과 대화 나서야"

"北 빈곤에 익숙 추가제재 실효성 의문"

DJ, 로이터 통신 인터뷰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에는 미국의 정책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4일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을 철수시켰으며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미국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 불가침, 금융 제재 중단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

야야 하며 이에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친구 뿐만 아니라 적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북미간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 '북한은 이미 빈곤에 매우 익숙해 있고 최소 생존을 위해 중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햇볕정책 실패론에 대해서도 그는 거부감을 표시하고 "햇볕정책으로 한국은 30~50년간 북한의 철도, 통신, 전기, 항공, 관광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으며 한국이 북한 경제의 운영을 보장받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며 성공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DJ, 28일 목표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정치 적 고향인 목포를 방문한다. 15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목포를 방문, 하의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1박 2일간 머무른다.

김 전 대통령은 당초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 방문도 고려했으나 건강 및 일정상의 이유로 목포에서 체류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목포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란 점에서 김 전 대통령이 추후 정계계편 등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정치적 행보에 나서고 있지 않느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아래에 명기된 곳은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Includes a list of member clinic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